

노동보건운동의 역사와 과제

마창 산추련 대표 심소보

1. 암흑기

70- 80년대초	
시대 상황	저임금, 장시간 노동/ 5공 암흑기
노동자	산재 피해자 개인의 문제 / 노동조합활동 부재
외곽단체	노동종교단체 활동/구로의원(80년대)
정부	초보적 제도 마련시작 /81년 산안법 제정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은 병영적 노사관계 체제가 노동 현장을 지배하였고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나라에 노동안전보건제도가 도입된 과정은 최초 노동자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국가(자본)의 자기필요에 인한 시혜적 조치로 제정 도입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근로기준법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1963년 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1980년 국보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등은 역대 독재정권이 민심수습 차원이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도를 완비하는 '구색 맞추기' 수준이었다.

- 따라서 그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현실에서의 적용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법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었다. 즉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만 지켜지더라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했던 것처럼,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였다.

2. 산업안전보건활동의 태동 - 송면이를 살려내라!!

- 1987년 6월 산재노동자 김성애 자살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발족
- 1988년 1월 상봉동 주민 진폐증 환자 발생 (박길래)
- 7월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 원진레이온 노동자 이황화탄소 중독
- 1989년 11월 대우자동차(인천) 집단 크롬 중독

87-89	
시대상황	노동운동, 사회운동 성장 노동자 대투쟁 직업병 속출
노동자	87 - 산재피해자 생존권 확보투쟁 88 - 직업병 부각, 단위노조개별적 산재추방활동 태동 89년 노동법 개정투쟁시기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와 보건의료단체 공대위가 연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투쟁
외곽단체	88 - 산재추방을 위한 외곽전문실천단체, 노동자활동지원(교육,상담) 문송면 원진레이온 대책활동 / 노건연 (보건의료인,법률인)
정부	89 - 산안법 개정문제제기 89 - 노동부 산안과-> 국신설

- 올림픽의 팡파레가 울리던 1988년, 한 15세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수은중독사건은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산업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참담한 충격속에서 우리는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방관이 이같은 비참한 현실을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산재추방운동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불구가 되어 버려지는 현실을 멈추게 하였고, 크롬중독, 납중독, 경견완장애 등 많은 직업병환자들을 찾아내어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산재없는 세상, 직업병 없는 세상에의 꿈을 세워나갔다.

- 진정한 의미의 노동보건운동의 역사는 19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의 폭발적인 자기 신장 속에서 출발하였다. 88년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대책 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 등 '산재·직업병'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별적 보상중심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부서 신설과 사업장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 요구가 80년대 후반 노동보건운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 산재와 직업병의 피해당사자와 잠재적 피해자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산업위생·산업보건의 전문인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연대하며 산재추방운동을 벌여왔다.

-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는 제1차 산재예방 6개년 계획('91 ~ '96),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91), 산업재해 감소 특별 대책('92) 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하나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권이 일부 보장되고,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단협을 통해 보다 높은 수위의 참여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노동자의 건강을 노동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1989년에 전개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주장되었다.

3.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는 노동조합

1990년 5월	오리엔트전자 9명 집단 수은중독
7월	국내 첫 레이노드씨병 발생 (도계 광업소 김은기)
11월	카드뮴중독 첫 인정 (현대정밀산업 윤종일, 한상구)
12월	면폐증 환자 최초 인정 (한국제강 최진익)
1991년 2월	첫 피부염 직업병 인정 (자동차정비업 16명)
6월	도금공장 노동자 4명 TCE중독 사망 (세진산업)
1992년 11월	석면 폐암 첫 보고 (안산 대원산업 염원실, 산재 불인정)
1993년 10월	벤젠취급 노동자 백혈병 사망 (광양제철소 신영배, 94년 2월 사망)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첫 인정 (제일화학 전복남)
11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조사 (노동조합에 의한)
	LPG선 폭발 16명 사상 (현대미포조선)

- 1994년 2월 기아자동차 소음성난청 검사표 변조 및 축소은폐사건
- 5월 대우조선 노동조합 소음성난청 및 진폐증 의심자에 대한 조사연구
- 7월 인천 진흥정밀화학 대형폭발사고
- 10월 현대정공 노동조합 진폐증 의심자에 관한 조사연구
- 1995년 1월 조선노협 소속 각 단사 소음성난청 및 진폐증 의심자에 대한 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치료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활동
- 2월 한진중공업 화재 참사(19명 사망)
- 3월 '조선소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청회'
조선 6개사 동시다발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 4월 지식인 264인 조선소 산재직업병 대책 마련 요구 성명서 발표
상경투쟁(노동부 항의방문, 기자회견)
- 5월 '조선업중 직업병 진단과 관리에 관한 토론회'
- 8월 LG전자부품 유기용제 집단중독사건
- 9월 대우조선 유기용제취급작업자 건강장해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사업

90-95년(전노협)	
객관적 상황	3당 합당/ 전노협 창립 /중대재해 급증/ 모든 대형사고 발생--사회적 안전의식고양 과로사 문제제기 시작
노동자	*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고 산업안전보건국이 신설, 단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부의 설치확산. 지역연대활동 본격화 (산안활동을 위한 전국 노조간부교육) * 91년 전노협은 보다 활동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존에 복지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부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승격시켰고, 지역활동을 공유하고 사안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그룹, 업종의 산업안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산업안전부장단회의'를 92년 4월부터 개최 * 94년에는 자동차, 조선, 금속 업종별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그 성과로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의 산업안전보건부 모임을 추진. * 95년 4월 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상경 투쟁
외곽단체	* 전국에서 단체설립(인천, 성남, 광주, 대구, 부산, 마창) 노조지원 사업 * 90년 7월 산재추방의 달 사업시작 * 전국적 연대(산재추방단체 연대회의)진행- 인적 물적 한계 보이기 시작 단순노조지원에서 정책개발 전문성 확보통한 조직 재정립 노력 * 산보센타추진위, 한국노동보건직업병 연구소, 구로한의원, 산업구강보건협의회 설립
정부	* 산재예방 6개년 계획 -산재감소특별대책 * 무재해운동 * 직업병 종합대책 * 산재보험통제강화--요통환자 강제치료종결,수지접합기준 * 산업보건규제완화와 사업주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산재예방특별사업/ 제도정비,명예감독관제도(형식적 노동자참여)도입

-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산재가 발생한 후 사후처리에만 매달리던 활동에서 벗어나 산재피해자의 복지와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되어갔다.

- 전노협에서는 단체협약 모범안을 만들어 각 단사 단위사업장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모범 단체협약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위상강화(단협과 동등한 효력), 산안부서의 위상강화와 현장차원의 제도(부서환경 개선위원 등) 확보, 검진제도의 개선을 위한 집단적 요구, 재해위험시 작업중지권 확보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다.
- 단체협약을 통한 제도 및 정책적 요구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작업중지권의 요구를 들 수 있는데, 재해위험시 작업중지권 확보가 중요한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95년 임단투 과정에서 경기남부지역 금속연대사업장과 마창지역의 경우 공동단협 요구안에 작업중지권을 포함시키고 공동투쟁을 전개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95년 상반기 조선노협의 투쟁과 더불어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는 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독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시, 감독권에 대한 요구로 모아졌다.
- 1990년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작업 중지권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법률적 내용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작업 거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노동보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상적인 파업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이 활용되고 있다.
-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전후하여 자본은 신경영 전략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며 현장의 노동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각종의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4.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확대

1996년 4월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유기용제 취급작업자 건강장해조사
산재사망사고에 따른 한리중공업 등 금속연맹 파업 및 상경투쟁

- 5월 대우조선 유기용제 역학조사 실시(1년 2개월간 실시)
- 7월 용접작업자 망간중독 첫 발생(포항지역 일용작업자) 작업중지권 요구 투쟁
- 9월 벤젠에 의한 백혈병 최초 인정(인천전화국 양육길)
- 11월 한국통신 집단 경견완 장애
- 1997년 2월 용접노동자 망간중독 인정(진주 K기공)
- 4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대우조선 김도범, 5월 사망)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용접자 건강장애조사 및 근골격계 장애조사사업
- 6월 DMF유기용제에 의한 전격성 간염 사망(대우 양산공장 허도량)
- 1998년 2월 벤젠취급 노동자 골수이형성증후군 첫 발생
- 5월 크롬에 의한 첫 직업성 비강암 발생, 기아중공업 심재갑

96-98년 (민주노총)

객관적 상황	민주노총 건설 / IMF이후 구조조정 전면화
노동자	* 연맹별 산안부 건설 (금속.자동차.병원.건설.조선.현충련) * 임단협시 주요현안으로 제기 (작업중지권)/ 금속 유기용제, 용접 근골격계 검진사업 * 고용을 위해 노동보건관련 축소 감내 (단협개약, 산안관련 예산축소)
의곽단체	* 산추단체 지역별 새로운 진로모색 /직업병연구소 금속과 긴밀한 사업./산재피해자 단체연석회의구성 / 원진의원 건립
정부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형식을 갖추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행정규제완화조치로 노동자의 목줄을 툐다 (9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의 의무는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은 강화) * 산재노동자의 피를 짜내 총 532억원 절약하라. (근로복지공단 고통분담대책 98년) ① 강제 치료종결 ② 재요양 억제 ③ 입원환자 통원 조치 ④ 장기요양환자 (1년이상) 집중 관리 ⑤ 진료비심사 강화 ⑥ 재가요양 및 취업치료 적극 유도 *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건설업종의 안전담당자 폐지, 조선업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업무 폐지,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보고 의무 완화,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완화

-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연맹별 담당부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금속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활동내용은 산안활동의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산보위의 조직률, 산보위의 심의의결 내용, 현장통제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중지권의 확보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 많은 노동조합 산안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검진, 재해 사후조치등의 사업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장투쟁을 이끌어 가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측정기관, 검진기관 선정, 참여 산재처리 사고 난 작업조건에 대한 개선이라는 일회적 사업에 그치고 말았다. 노조 산보위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동보건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고 현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 96년 노동법 개악에 대한 96·97년 전국적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경제불황과 IMF 구제금융,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보다 전면화시키면서 광범위한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 불안정 고용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였으며 국가는 '기업경쟁력 회복'을 이유로 각종의 기업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규정을 완화하였다.

5. 현장중심의 노동보건운동 모색 (1999-2003)

1999년 3월	산재추방운동연합 출범
1999년 7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2000년 3월	한라중공업 위성태동지 자살과 금호타이어 김광수조합원 서류조작 은폐건에 대한 투쟁
5월	세브란스병원 산재지정반납사건에 대한 투쟁 현자 정공본부 근골격계 투쟁 산재추방운동연합 해산
2001년 4월	금속연맹 산재추방 상경투쟁과 근골격계 사업 산재보험개혁 공대위구성
2002년 4월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마련 투쟁

- IMF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고용과 임금보전 문제에 밀려 노동자 건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본의 일방적인 고용파괴와 임금삭감에 짓눌려 90년대 초·중반에 투쟁의 성과로 획득했던 노동조건 개선 사항과 각종 수당의 성과를 고용유지와 맞바꾸거나, 단체협약에 보장·명시된 노동조건 내용들이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의연한 현장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투쟁과제를 핵심 실천과제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대중투쟁은 정체하고 있다. 현장이 무너졌다는 평가와 우려 깊은 걱정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현실의 현장이다. 최근 민주노총 차원에서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의 투쟁과제로 진전시키려는 다양한 실천이 시도되고 있다.

- 현장, 단체, 전문역량이 통합하는 형태로서 99년초 산추련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산추련은 내용적 운동적 통합이라기 보다는 기술적 형식적 통합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 변혁적, 계급적 운동으로서 노동보건 운동의 전망을 밝히지 못한 채 이상관 투쟁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산하고 말았다. 1999년 이상관 투쟁은 노동안전 보건 운동 진영의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였다. 그 동안 전문주의에 기반한 운동 방식이 중국적으로 개량주의적 정책운동론적 관점에 함몰됨으로써 노동운동 고유의 동력화 경로인 현장의 활성화와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현장의 노동보건 운동을 대상화시킬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결과이다.

- 자본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반노동자적 관점과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자본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사안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노사 공동책임론 혹은 노사정 공동책임론을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무수한 예외조치 불가피성과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며 사실상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갖고 있는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의 성격을 거세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자본의 이윤보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취임 초기의 친노동적인 태도표명은 지킬 수 없는 수사에 그치는 말일뿐, 스스로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 정권임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파괴당한 현장을 복구하고, 골병과 죽음의 현장을 멈추기 위한 노동보건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하고 조직하고 실천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창지역 노동보건운동의 흐름〉

50년

12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창립

51년

7월 제1회 산재 직업병 추방을 위한 마창노동자 한마당
11월 노동자 건강을 위한 모임 창립총회

52년

3월 수지 접합술 인정기준 철회투쟁
7월 제 2회 산재추방의 달 사업
4-5일 제1회 마창/거제지역 노조간부교육
8월 요통환자 강제치료종결조치 철회 투쟁--일건, 노건 대책회 구성

53년

2월 제1회 산업안전보건교실 '경관완장애, 예방에서 보상까지'
7월 제3회 산재추방을 위한 노동자 한마당

54년

7월 건강한 일터맞이 제4회 [산재추방을 위한 노동자 한마당]
-- 7.13 오후 6시 30분 창원대학교 봉림관
11월 제2회 산업안전보건교실' 요통, 예방에서 보상까지'

55년

4월 사무실, 이진 개소식 (노건, 일건통합)
4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김동근사망사고 관련 대책활동
5월 마산 창동집회, 가두행진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7월 마창 산재자 불합리한 처우 저지 대책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한 처우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병원 산재환자대상), 항의방문
7월 '제5회 민주노총 건설과 산재추방을 위한 노동자 한마당'
'신경영전략과 노동자 건강' 7.5
'산재현실 알리기 시민선전전' 7.12 창원정우상가
8월 15년간 도장공으로 일하다 93년 11월 사망한 통일 임현수 동지, 행정소송끝에 직업성암 사망 인정

9월 1일 마창 산재동우위원회 발족
9월 마창지역 민주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임 구성

56년

4월 민주금속연맹 유기용제 검진 사업, 6월 설명회 및 노동부 항의방문
4월 작업중지권 확보투쟁
7월 제7회 산재추방의 달 문화한마당
작업중지권,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참여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57년

2월 삼특 조합원 집단 소음성난청 장애보상 인정투쟁
4월 금속연맹 산재, 직업병 대책 요구 투쟁
4월 근골격계 질환 및 용접작업에 대한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사업(금속연맹과 공동)
7월 산재추방의 달 기념식 및 산업안전 기원제

58년

5월 21일 대우중공업 노동자 취업치료조치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고등분담 대책' 입수
6월 마산삼성병원 부실검진에 대한 노동부 항의방문
5월 크롬 비강암 최초 직업병 판정
7월 산재노동자 문송면 10주기 기념토론회 및 노동자 한마당
8월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 팽윤소견 바로잡기투쟁

59년

1/2월 마창지역 요통조사사업 (현대정공, 대림, 한진)
3월 산재추방운동연합 창립총회
7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155일동안

60년

산재추방운동연합 해산
노동보건 연대회의(준) 활동시작